

EU Brief

| EU 동향 |

-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위한 유럽과의 협력
Korea-EU Industrial cooperation for upgrading value chain
- 새로운 국면을 맞은 유로존 위기
Eurozone crisis entering a new phase?
- EU 주요국의 대중동 정책
Middle East policy of EU member states
- 유로존 위기 전후의 중부유럽 FDI 유입 동향
Central Europe's FDI inflow trend: before and after the Eurozone crisis
- 2013년 EU 광고산업의 3대 이슈
Three key issues of EU advertising industry in 2013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EU의 규제

Multinational corporation's tax avoidance & EU's response

EU member states have experienced numerous difficulties as tax revenues declined, welfare spending increased and economic growth slowed down in the aftermath of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y are now considering various measures to increase tax revenues. Taking strict measures to address tax evasion and avoidance is considered important in ensuring economic recovery as well as transparency. The EU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practicing transparent governance at numerous events in 2013 such as the EU Summit in May, the G8 Summit in June and the G20 Summit in September. Recently, a number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been found to take strategic measures to reduce their taxable income and this has further strengthened the EU's desire to tackle tax avoidance.

EU의 조세 투명성 강화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수 감소, 재정 수요 증가, 저성장 지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회원국 정부는 세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탈세와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기회복은 물론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 투명성 강화에 대한 EU의 일관된 입장은 2013년 5월에 열린 EU 정상회의, 6월의 G8 정상회담, 그리고 9월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공격적인 절세 기법을 동원하여 수익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방안들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EU 회원국들은 조세수입 감소 및 지출 증대라는 재정악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EU 회원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기간에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EU는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EU 각국의 조세수입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뚜렷한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EU의 각국 정부는 조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가세율을 인상하였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향 추세에 있던 EU 회원국들의 소득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하여 EU 역내 및 역외에서 탈세와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 되었다. 일례로 소득세율은 EU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가 간 편차가 크며 결과적으로 회원국 간 세율 차이에 따른 탈세 및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¹ EU 각국 정부는 당초 세수 확보를 위하여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 혼란만 초래한 채 구체적인 성과 달성에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² EU 역내를 기준으로 약 1조 9,000억 유로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유럽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상이하며 해당 지역의 고유한 사정으로 인해

¹ 개인소득세율은 2013년 기준으로 스웨덴이 56.6%로 가장 높은 반면, 불가리아는 10.0%로 가장 낮아 세율 차이가 46.6%p에 달함. 법인세율은 프랑스가 36.1%로 가장 높은 반면, 불가리아와 키프로스는 10.0%에 불과해 프랑스와 26.1%p의 세율 차이가 발생
² 프랑스 정부가 소득세율을 75%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영화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등이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였으며, 동 방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 등 논란이 가중

지하경제를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³

부유세 도입 방안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원 확보 방안이 실행 단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EU 회원국들이 최근에는 불법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의 정보를 공개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과도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다국적 기업들의 역외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한편,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은행 비밀주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예외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은행 비밀주의에 대한 정보 공유 요청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사례

최근 구글과 스타벅스,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면서도 수익을 세금이 낮은 지역의 법인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⁴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조세회피지역과 기존에 체결한 이중 과세 방지협정을 폐기해 지나치게 적은 세금을 낸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납세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G8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i) 국가별 세금정보의 자동교환, (ii) 조세회피 목적의 수익 이전 행위 차단을 위한 세제 보완,

(iii) 기업의 소유 및 수익 구조에 관한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의 조세정의 구현 과제를 설정한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과 구글은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창출한 수익 대부분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하였다. 1990년대 후반 생산시설이 폐쇄된 후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이 서류상의 지주회사로만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특허권 사용료 등 지식재산권 수익을 자사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하여 1,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비축하였다.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은 각국의 세법상 맹점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거둔 수익 740억 달러 중 2%만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구글은 광고 검색 등에서 창출한 수익을 특허권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세금을 크게 줄였다.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⁵로 불리는 구글의 절세 기법은 수백 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세회피 방식을 통해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 파운드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법인세로 단 600만 파운드만 납부했다.

또한 아마존과 스타벅스는 의도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였다. 영국 스타벅스는 네덜란드의 유럽 본부에 로열티를, 스위스의 계열사에 커피 구매료를 지급하여 의도적으로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영국에서 3년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14년간 영국에서의 매출액이

⁵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조세회피 기법은 아일랜드 회사 두 곳과 네덜란드 회사 한 곳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선 아일랜드 법인을 설립한 후 여기에 다국적 기업의 수입,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수익을 송금함. 그리고 나서 아일랜드 밖, 특히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나 버진 아일랜드 등에 있는 아일랜드 법인으로 돈을 송금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네덜란드 법인을 중간에 포함시킨,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모은 돈은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아일랜드 법인의 자회사로 이전시키며, 아일랜드의 속지주의 조세 원칙에 따라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아일랜드 법인의 자회사는 본사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³ 유럽 내에서도 동유럽(24.6%)과 남유럽(22.5%)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북유럽(13.7%)과 서유럽(11.1%)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동유럽과 남유럽의 국가들에서 지하경제가 만연한 이유는 시장개혁 이전에 이미 부패 존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금거래의 보편화, 상호부조 등 지하경제 활동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감되었기 때문임

⁴ "EU, 다국적 기업·조세회피처 부당 세금거래 의혹 조사." (2013. 9. 12.). 「서울경제」.





31억 파운드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납부액은 86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아마존은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면서도 수익을 내지 않는 방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아마존의 매출은 2012년에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3,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법인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아마존은 이미 2007년 영국에서의 사업 부문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이전하여 영국 내에서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절세 기법을 활용한 결과, 다국적 기업들은 EU에서 매출액 대비 0.1% 내외의 세금만 부담하고 있다.

★ 주요국의 법정 법인세 현황

국가	세율(%)
미국	35.0
프랑스	33.3
일본	28.1
영국	23.0
독일	15.8
아일랜드	12.5
버뮤다	0.0

주: 사례별로 적용된 최고 한계세율

EU의 조세회피 규제 방안

유럽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납세를 회피하는 행태에 대하여 EU 회원국들은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실행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2월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5월 EU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정보 공개에 관하여 EU 회원국 정상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EU 정상회의에서는 2013년 말까지 역내 은행 계좌정보 자동교환제도를 도입하여 은행 비밀주의를 개혁하고 금융거래 정보를 국가 간에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그동안 금융정보 공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EU 정상회의 전 이를 철회하고 은행 계좌정보 공유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연내에 은행 계좌정보 자동교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5개국은 2013년 4월 탈세방지를 위한 은행 계좌정보 상호교환에 합의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EU 이사회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 등 비회원국들과 은행 계좌정보 교환협상을 위한 권한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EU 정상회의를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협상권한을 인정받게 되었다. 2013년 6월의 G8 정상회담과 9월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조세정보를 공유하고 조세 투명성 확대를 위한 국제 규범을 수립하는 과제를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가 간 조세정보의 자동교환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모델을 2014년까지 OECD를 중심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각국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스위스 정부와의 은행 계좌정보 제공 협정을 통해 스위스에 은닉해놓은 독일인 재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탈세 방지를 위한 은행 계좌정보 상호교환에 합의하였다. 영국은 2011년 12월 스위스와 역외탈세방지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국세청의 조세회피 추적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회피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하였다. 미국은 실제로 2009년 스위스의 UBS 은행을 상대로 미국인 고객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UBS는 4,000여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7억 8,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더 나아가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인 보유 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해외 금융기관 계좌신고제(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도입하였다. 외국 금융기관이 정보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좌신고제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은 미국에서 얻는 금융 수익의 30%를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 간 금융거래 정보 공유 확대와 은행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EU 역외 국가들의 느슨한 금융 규제 및 조세 기준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재정수입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나치게 낮은 세율 또는 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유해한 조세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국제적인 조세 기준⁶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조세피난처 등 특정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중비과세 현상’을 방지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역외 수익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별 납세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EU 집행위원회는 법인세 정보교환을 거부하는 국가들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를 자주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남용 금지조항(General Anti-Abuse Rule)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들과

체결한 이중 과세 방지협정을 폐기하여 지나치게 세금을 적게 낸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법적 의무 이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EU 회원국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공조가 필요한데,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역외 국가들과의 국제 공조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적 기업들의 공격적 절세 기법에 대한 비난 여론에 힘입어 각국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국제 거래상 법적 의무 이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 평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영국에서 조세를 회피하고자 했던 움직임이 알려지자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결국 자발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아마존과 구글도 관련 국가들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 재정악화 상황에 처해 있는 정부가 역외탈세,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등의 지능적인 탈세·탈루 사범을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바, 합법적 절세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 등에 힘입어 불필요한 오해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⁶ EU 집행위원회는 최소한의 국제적 조세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i) 조세혜택이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 (ii)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경제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혜택이 제공되는지 여부, (iii) 다국적 기업의 이익발생지 결정 기준이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상이한지 여부 등을 고려할 계획

